

심사보고서

1. 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905 |
|----------|-----|

2021. 12. 16.(목)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숙애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1년 11월 12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15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12월 6일

-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숙애 의원)

가. 제안사유

-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는 매우 중요하나 장애유형별, 개개인별로 의사소통지원이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충청북도 내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네트워크의 통합·관리를 위해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를 증진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를 명시함(안 제3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김주희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2019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장애인종합계획(2018-2022)’에 따르면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참여를 하기에는 여전히 제약 요인이 존재하고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보완대체 의사소통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장애인복지법」 및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에서 구어를 통한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장애인 대상으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센터는 없음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를 통해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기립훈련기,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 등 신체 보조기기 위주로 대여 및 보급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기인 감각 보조기기,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등은 보급 부족과 대여불가로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는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임

- 충청북도장애인단체협의회(21. 7월 출범)에서는 25개 요구안을 발표하며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보장의 부족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들의 권리증진을 위한 종합지원 체계 마련을 요구하였음
- 본 조례안은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등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정의)

- “의사소통”의 정의를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심리적으로 교류로 규정하였고,
- “보완대체의사소통”은 개인특성에 따라 보완·대체할 수 있는 상징체계와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 장애인이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가짐을 명시함

○ 안 제4조(책무), 안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 안 제4조에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등 제반 환경 조성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기술·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에 도지사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안 제6조(홍보 및 교육)

- 안 제6조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안 제7조(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장애인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현재 서울특별시(2020. 9월 개소)에서만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중임

- 센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탁운영에 관한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상위 법령인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충청북도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함

- 장애로 인해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은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의사소통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권리이며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해 의사소통 수단 개발, 의사소통 지원 강화와 장애인 정보 접근성 보장 등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과 더불어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함

- 현재 충북의 청각장애를 포함해 모든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기관은 수어통역센터가 유일하며 의사소통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가 필요함

- 본 조례안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규정함으로써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며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구체적 사업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시설들과의 교육, 지원 등 운영 내용의 중복성 등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이숙애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905 |
|----------|-----|

발의연월일 : 2021년 11월 12일
발 의 자 : 이숙애, 박형용, 이상욱
이의영, 장선배, 허창원
윤남진

1. 제안이유

-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는 매우 중요하나 장애유형별, 개개인별로 의사소통지원이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충청북도 내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네트워크의 통합·관리를 위해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를 증진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를 명시함(안 제3조)
- 다.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라.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마.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2021. 11. 18 ~ 2021. 11. 23
- 다. 협의 :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라.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몸짓 또는 그 밖의 다양한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집단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자신의 정보, 감정, 생각 등을 서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4. “정당한 편의”란 의사소통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 성별, 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인적, 물적 모든 의사소통 수단 및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장애인은 정보접근 및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소통할 자유에 대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의사소통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조력인, 한국수어·축수화 및 문자통역, 읽기 쉬운 자료,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 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기 등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의 경우에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6. 2. 3., 2017. 12. 19.>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12. 3.>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7. 12. 19.>

1.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장애인학대 등 안전문제 또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
3.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4.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5.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6.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7. 그 밖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장애인 지원 사업과 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본조신설 2015. 6. 22.]

[제32조의4에서 이동 <2017. 12. 19.>]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의사소통·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로 한다. <개정 2018. 6. 19., 2021. 6. 1.>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신설 2018. 6. 19.>

1. 음성변환용 코드
2.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 [제목개정 2016. 8. 2.]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

③ 인식개선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6. 29.>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④ 인식개선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 6. 1., 2021. 6. 29.>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교육 대상인원 및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

[전문개정 2016. 6. 28.]

[제목개정 2021. 6. 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법 제32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그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지원 사업 지침 개발 및 교육
2. 장애인 지원 사업 홍보
3.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한 민관협력 촉진 및 지원
4. 신규 장애인 지원 서비스 연구 및 개발

5. 장애인 지원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6. 그 밖에 장애인 지원 사업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9. 6. 4.]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12. 19.>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9호·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3., 2017. 9. 19.>

②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③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1. 7. 27.>

④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6. 2. 3., 2021. 7. 27.>

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3. 3. 23., 2017. 7. 26., 2021. 7. 27.>

⑥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11., 2014. 1. 28., 2017. 12. 19., 2021. 7. 27.>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제목개정 2010. 5. 11.] [시행일 : 2023. 1. 28.] 제21조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12. 19.>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신설 2018. 6. 19.>

1. 음성변환용 코드
2.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

②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6. 19.>

1.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2.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3.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8. 2.>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2.>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 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5. 19., 2016. 8. 2.>

1.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2.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사소통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도구를 개발하고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담당 직원이 발달장애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침을 개발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의사소통도구의 개발·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사소통도구의 개발·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등(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등을 개발하는 경우에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품목·기준 및 규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 교원의 교육 및 연수 과정에 의사소통도구 활용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개발하는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 및 의사소통도구 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제1항에 따른 의사소통 지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제5조)
- 홍보 및 교육(제6조)
-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제8조)

2. 비용발생 요인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획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 홍보 및 교육비
-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비(인건비)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50,000천원
※ '20년 충북장애인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적용
- 홍보 및 교육비 8,000천원(80회×100천원)
-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비(인건비) 연 76,150천원
 - (상담시설) 위탁 계획으로 비용 없음
 - (운 영 비) 공공운영비 및 제세 수수료 등 12,000천원
 - (인 건 비) 직원(2명) 64,150천원
※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보수지급기준 평균임금 적용(4급3호)

나. 추계 결과('22년부터 향후 5년간 총비용) : 470,750천원

- 용역비 50,000천원, 홍보및교육비 40,000천원, 시설 운영 380,75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 구 분 | 1차년도 (2022년) | 2차년도 (2023년) | 3차년도 (2024년) | 4차년도 (2025년) | 5차년도 (2026년) | 계 |
|-----------------------|-----------------|-----------------|-----------------|-----------------|-----------------|---------|
| 총 액 | 134,150 | 84,150 | 84,150 | 84,150 | 84,150 | 470,750 |
|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 50,000 | - | - | - | - | 50,000 |
| 홍보 및 교육비 | 8,000 | 8,000 | 8,000 | 8,000 | 8,000 | 40,000 |
|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 76,150 | 76,150 | 76,150 | 76,150 | 76,150 | 380,750 |